

# ‘원칙’과 ‘유연함’... 실용적 대처

青, 경험사무소 남측 요원 철수 예의 주시…“대북관계 비관도 낙관도 안해”

청와대는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경험사무소 남측 요원의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사태 주이에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對南) 기조를 드러낸 첫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준비와 계산 끝에 나온 것인 믿음 북한의 의도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제2차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당하게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대처해 나가되 불필요한 상황 악화는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절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대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돌발 상황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수차 과거식의 ‘퍼주기’ 같은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구체적인 조건과 성공 가능성 등을 따져 가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새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이 27일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전원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실용적 원칙을 북측에 전달해 온 것.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협상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뜻밖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통일부의 모든 간부들은 이제까지 해온 뜻을 수차 표명해 왔다. 강·온의 양면을 바탕으로 협상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권 결

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과거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드러낸 단적인 예로 해석된다.

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대

북 경협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단절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 표명해 왔다. 강·온의 양면을 바탕으로 협상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고 살펴왔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그동안 유심히 관찰해온 결과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놓고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면서 “남북관계 전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업을 정치논리를 동원해 하루 아침에 중단시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하루 빨리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며 “6·15 공동선언과 2007년 2차 남북정상선언에서 후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민주 “개성공단 좌초 위기 유감”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7일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철수시킨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일부를 실용 논리가 남

북 교류협력이라는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었다”며 “북한 당국 역시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한 당국을 함께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한 기

술력과 자본, 북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경제협력의 유통자가 된 개성공단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난 성과가 축적된 개성공단 사

도 극복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 ‘MB 대북정책’ 중대 기로

## ■ 경험사무소 남측 요원 철수 의미·파장

탐색전 끝낸 北, 첫 공식 경고 메시지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할 듯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신호탄인가, 단순한 기싸움의 연장선인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남북경협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11명 전원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집

발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한은 2006년 우리 정부가 북

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유보

한 것을 문제 삼아 그해 7월 21일께

경협사무소에 상주하던 9명의 북

측 인원 가운데 당국 인력 3명을

증고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

명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핵문제 탈경위는 개

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

하중 통일장관의 최근 발언을 문

제삼아 26일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들을 3일 내에 전원 철수할 것

을 요구했고 남측은 27일 새벽 11